

EU의 대북정책의 특징: 규범적 권력 vs. 전략적 이익추구

이종서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위촉연구원)

유럽연합은 대북정책을 통해 보편적 인권을 강조함으로써 규범적 권력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북한 인권문제 제기를 계기로 유럽내부의 온도 차이를 줄이면서 동시에 유럽 시민권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유럽연합 주도의 대북인권정책이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리스본조약이 발효되었다 할지라도 유럽연합은 보충성의 원칙을 앞세운 회원국가의 독자적인 문제 해결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는 규범적 권력의 확산과 전략적 이익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중적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 결과 유럽연합은 북핵문제의 재발과 북한인권문제와는 별개로 2007년부터 착수하려던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위생지원, 기술지원 등 인도적 지원을 다시 시작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자원 및 기간산업 선점을 목적으로 대북한 투자를 늘리는 초국적 기업들의 숫자가 줄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단지 규범적 권력의 확산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대북 정책에 관해서도 유럽연합과 정책을 조율하고, 한-EU 간 대북 공동투자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북한에게는 경제적 지원의 확대 및 북한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으며 한미일 공조를 보완할 유용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572 (697-120)
전화: 064)735-6500 팩스: 064)735-651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 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

목 차

- 1. 동서유럽의 대북관계 역사: 의존과 갈등
- 2. 대외원조 정책: 인도적 지원 vs. 전략적 고려
- 3. 유럽연합의 '신아시아 전략'과 대북 접근방식
- 4. 선택적 포용정책과 전략적 이익추구
- 5. EU의 한반도에서의 역할 전망

1. 동·서유럽의 대북관계 역사: 의존과 갈등

- 탈냉전 이전 유럽연합과 북한과의 관계는 동유럽 국가와 북한과의 관계에서 볼 수 있듯이 이념적 요인과 북·소관계라는 정치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함. 그러나 탈냉전 이후 북한은 유럽연합으로부터 선진 기술을 도입하려는 목적에서 특히 서유럽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노력을 기울여 옴.
- 탈냉전 이후 유럽연합은 대북협력정책을 경제 및 정치통합과정의 심화와 확대과정에서 유럽연합의 내재적 가치를 실현하고 동질성을 확인하는 데 좋은 기회로 활용하려 함. 그러나 유럽연합과 북한 간의 관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인권문제 등으로 인해 양자간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음. 또한 유럽연합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행위자로 간주되지 않음.
- 한편, 유럽연합은 공식적 지원규모는 줄이는 대신, 초국적 기업을 통한 대북투자를 늘리고 있음. 이는 첫째, 북한의 광물 및 지하자원에 대한 선점, 둘째, 기간산업 선점, 셋째, 시장 확대를 대비한 포석의 차원에서 해석이 가능함.

<표 1> 북한-유럽 관계의 시기별 특징

| 시기 | 주요사건 |
|---------------|--------------------------|
| 1948년 ~ 1954년 | 냉전 (진영외교) vs 유럽의 비자발적 협력 |
| 1955년 ~ 1976년 | 다변외교와 독자노선 추구 |
| 1976년 ~ 1988년 | 데탕트와 공식 외교관계 수립 모색 |
| 1989년 ~ 1998년 | 인도적 지원과 정치적 고려 |
| 1998년 ~ 2002년 | 경제적 영향력 확대 |
| 2002년 이후 현재 | 인권문제와 북한의 대유럽연합 시각변화 |

가. 북한의 진영외교 vs. 유럽의 비자발적 협력

- 북한정권이 수립된 1948년부터 1954년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외교정책은 사회주의 진영에 국한된 진영외교의 양상을 보였음. 북한정권 수립 초기 소련 일변도의 진영외교가 성립된 배경은 소련이 북

한에 대하여 정신적·물질적 지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데 있음. 비록 1948년 12월 소련군이 북한에서 철수하여 형식상 소련군정은 끝났으나, 그 후에도 3,000여 명의 소련 고문단이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분야에 있어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사실상 북한은 소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음.

- 한국전쟁의 발발과 함께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전쟁수행 원조와 중국군대의 파병에 외교정책의 초점을 두고 적극적인 대중·소외교를 전개함. 한국전쟁을 계기로 북한과 사회주의진영 국가들과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졌음.
-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던 서유럽 국가들은 휴전협정 이후 1954년 제네바 정치회담에서 한국, 미국, 유엔 참전국들과 함께 북한 및 공산측 대표들과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함. 여기서 특이할 점은 서유럽 국가들은 비록 기본적으로 한국 및 미국과 협력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사안에 따라 서로 다른 입장을 내세움으로써 간접적으로 북한의 입지를 강화시켜주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는 점임.
- 서유럽 국가들 중 유엔 가입국인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이 한국전에 참전함으로써 북한과 서유럽 국가들 사이에는 적대적 긴장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음.

나. 다변외교와 독자노선 추구

- 1955년부터 북한은 기존의 중국과 소련 중심의 진영외교에서 탈피하기 시작함. 다변외교를 선언한 북한은 일본과의 접촉을 시작으로 인도,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확대함. 김일성은 1962년 10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자본주의 국가들과도 정상적인 관계를 수립하며 경제·문화교류를 발전시키기를 원한다”라고 언급한 것을 시작으로 북한의 다변외교는 1960년대에 들어 오면서 더욱 확대됨.
- 1960년대 들어와 북한의 다변주의 외교정책과 함께 중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짐. 그 결과 북한과 서유럽 국가들 간의 접촉이 시작됨. 또한 1966년 서독의 할슈타인 원칙의 포기과 동방정책도 유럽 국가들이 북한과 접촉을 시작할 수 있는 중

탈냉전 이후 EU는 대북협력정책을 통해 EU의 내재적 가치와 동질성을 확인...

60, 70년대 북한은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고자 서유럽과 관계개선을 추구

요한 계기를 제공하였음. 그러나 냉전체제의 영향으로 양자간의 관계는 정부차원의 교류로는 발전하지 못함.

- 이러한 민간교류 수준의 북한과 서유럽 국가들과의 관계는 196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정부간 협력 형태로 발전하기 시작함. 북한은 1차 7개년 계획(1961년~1967년)을 추진하면서 주체 경제적 사회주의 발전전략의 한계에 봉착함. 그 결과 북한은 자립적 계획경제 건설전략에 한계를 느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서유럽으로부터 구하고자 함.
- 서유럽 국가들도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북한과의 수교에 적극적이었음. 그 결과 1971년에 몰타가 서유럽 국가들 중 처음으로 북한과 수교를 맺음. 이어 1972년 말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등이 양국간 외교관계 수립을 검토하였고, 같은 해 4월에서 7월까지 약 4개월간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란드와 수교를 함. 그리고 이듬해인 1974년에는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1975년에는 포르투갈이 북한과 수교를 맺음. 그러나 동서냉전이라는 국제정치의 현실로 인해 서독,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서유럽의 주요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수립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 북한은 1970년부터 프랑스, 서독, 스웨덴 등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고 서방과의 교역을 확대한 결과 1971년에는 15%에 불과했던 대서방무역이 1974년에는 대공산권 무역과 거의 같은 42%에 달함. 1975년에는 오히려 비공산권국가와의 교역이 공산국가와의 교역을 능가함. 그런데 서방으로부터 차관 및 선진기술 도입이 1970년대 중반 북한의 무역수지 적자와 외환사정 악화를 초래함. 1970년부터 가속화되었던 북한의 무역수지 적자가 1975년에는 결국 최악에 달하였고 같은 기간에 북한이 서방국가로부터 빌린 외채가 12억 4천만 달러에 달함. 결국 1975년 북한은 외채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였고 서유럽과의 관계는 급랭하였음.
- 마침내 북한은 보유 중인 금과 은을 영국과 서독의 은행에 매각하고 차관의 상환연기 등을 위해 교섭을 벌였으나 끝내 신용회복에는 실패함. 결국 영국은 1976년 북한과 개설한 민간무역협회 사무실을 폐쇄했으며, 채권국가들은 수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추가 차관 제공의 중단을 논의하기에 이룸.

다. 데탕트와 공식외교관계 수립모색

- 서유럽에 대한 북한의 정부차원의 정치적 접근은 쉽지 않았음. 냉전상황에서 북한이 자본주의 진영에 속한 서유럽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음. 유럽국가들 또한 북한과 정치적 관계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음. 무엇보다도 당시 남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던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들은 할슈타인 원칙을 고수하고 있던 남한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음.
- 1970년대 들어서면서 서유럽은 그동안 진행된 유럽통합의 발전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노선을 시도함. 이는 1970년대 들어오자마자 미국이 처음으로 무역적자를 보게 된 것과 깊은 관계가 있었음. 무역적자의 주된 원인은 달러가치의 고평가에 따라 미국의 수출 경쟁력이 하락했기 때문임.
- 1970년대 들어 북한도 자주노선을 견지하면서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함. 그 일환으로 북한은 남북대화, 미국에 대한 직접 접촉 제의, 국제기구 가입의 확대, 비동맹운동 참여 등 외교 활성화에 박차를 가함. 김일성은 “조선반도의 남과 북에 대하여 침략적 성격이 없는 균등한 정책을 실시하는 자본주의 나라들과도 평화공존의 원칙에서 국가적 및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라고 천명함으로써 대서방 외교에 대한 적극성을 나타냄. 그러나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북한은 1976년 이후 신용위기 상황으로 신뢰를 잃음.
-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북한은 다시금 대서유럽관계 복원을 시도하기 시작함. 북한은 1984년 9월 합영법을 제정하여 공업, 건설, 운수, 과학기술, 관광업 등 5개 분야에 걸쳐서 서방의 자본과 기술 도입을 촉진시키려 함. 북한이 이와 같이 외교를 활성화하고 대외개방을 추진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필요성 때문이었음.

2. 대외원조 정책: 인도적 지원 vs. 전략적 고려

- 북한의 대외정책은 1980년대 말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체제 붕괴 등 급격한 대외환경을 목격한 이후 변화를 거듭함. 중국은 한국과

80년대 이후

서유럽과의 관계를

복원하고자한 이유도

역시 경제적 필요성

EU로서는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과 관계를 추진

의 수교를 결정하였고 북한에 대한 군사·경제적 원조 또한 현격하게 줄임. 북한과 구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를 보면 과거 전통적인 공산당을 주축으로 하는 특수 관계에서 국가 대 국가의 실리적 관계로 변화함. 냉전기 북한의 대외관계는 주로 국제적 요인, 이데올로기적 요인과 체제건설 및 유지와 관련이 있음.

- 1980년대 중·후반 이후, 특히 1989년부터 동유럽 국가들이 다당제를 채택하면서 북한과 동유럽 국가들 간의 이념적 동질성이 사라지게 됨에 따라 북한의 대동유럽 인식은 매우 부정적으로 변하게 됨. 많은 동유럽 국가들이 북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한과의 수교를 강행하고, 북한에 대한 무상지원을 중단함으로써 북한과 동유럽 국가 간의 우호적 관계는 급격히 냉각됨. 결국 냉전 이후, 북한의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인식에는 경제적 요인만이 자리 잡음.
- 더욱이 북한은 대서방외교의 대상을 서유럽으로 확대하고 경제지원 확보 및 과거 아웅산테러사태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함. 특히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개선이 여의치 않고 두 나라와의 경제적 교류 또한 정치적인 문제에 얽매어 큰 진전을 보이지 않았음. 이에 북한은 경제난 극복이 체제생존에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외교의 방향을 서유럽까지 돌리게 된 것임. 그러나 북한은 서유럽 국가들에 의한 사상적 오염을 두려워한 나머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서유럽 국가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음.
- 유럽연합 차원의 직접적 대북 지원정책은 1995년 북한의 홍수피해에 대한 집행위원회 산하 인권사무국(ECHO: European Commission Humanitarian Aid Office)이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됨. 이 시기 이전 유럽연합과 북한 사이에는 공식적인 대화채널이나 외교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음. 특히 서유럽 국가들과는 경제적인 상호교류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였고 정치적 이슈 또한 없었음.
- 인도적 지원사업은 유럽연합으로서는 거의 자동적인 기제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으로서, 북한에 대한 정치적 고려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음. 탈냉전 이후 북한과 유럽연합과의 관계는 자연재해와 기

근이 겹침으로 인한 인도적 지원사업에 의해 촉발된 성격이 강함. 이 시기에 유일하게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연합의 정치적 입지를 수립할 수 있는 채널이 된 KEDO에 유럽연합이 참여한 것은 상당한 정치적 의미가 있음. 하지만 사실상 유럽연합의 KEDO 참여는 1990년대 초반에 발칸에서 일본이 벌였던 지원활동에 대한 유럽 측의 보답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됨.

- 1998년 이후 유럽연합은 한국과의 경제관계 발전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및 긴장완화를 위해서 북한에 보다 적극적인 압력을 행사하기로 함. 특히 북한과의 정치적 대화를 계속하고 북한의 대응 양상에 따라 향후 북한과의 쌍무적 관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할 것을 희망함.
-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자 유럽연합 이사회는 2000년 10월 9일 한반도에 안정과 안보를 구축하기 위해서 남북간 화해협력의 계속할 것을 북한에 촉구할 것을 결의함.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북한과의 정치대화를 강화할 것, 북한사람들의 초청 등을 통한 신뢰와 평화구축, 중기적 기술지원을 염두에 둔 준비조치 실행, 북한에게 유럽연합 시장개방 확대 검토 등의 계획을 천명함. 이와 같은 정책의 기본방향은 2000년 11월 20일의 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유럽연합의 행동지침으로 공식화됨.
- 이러한 행동지침을 토대로 유럽연합은 북한에 대해 본격적으로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도모함. 첫째, 유럽연합의 대북한 정책은 KEDO 지원의 확대에 나타남.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을 다루는 유럽연합의 KEDO 참여갱신 협약에서, 유럽연합은 2005년 말까지 매년 2,000만 유로의 재정분담금을 제공하기로 함. 둘째, 1998년부터 시작된 북한과의 정치대화를 강화하고 지속함. 유럽연합은 남북한의 화해협력과정을 지원하면서, 이에 기여하기 위하여 북한과의 대화를 발전시키려고 함.
- 2000년 10월과 11월의 유럽이사회 회의 결과 집행위원회는 두 가지 측면에서 대북한 지원사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함. 하나는 북한상품에 대해 유럽시장의 개방을 확대함으로써 북한의 수출산업을 도와주는 것이었음. 다른 하나는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으로 단순한 인도주의적 원조에서부터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

EU는 98년 이후
한반도의 안정, 평화 및
긴장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시작

EU는 WMD문제의 해결을
통하여 EU의 위상과
영향력을 확대 의도

키는 개발 원조로 방향전환을 모색하였음. 이를 위해 2001년 2월 북한에 전문가 팀을 파견함. 이 팀의 북한 현지답사를 바탕으로 우선사업 분야가 정해짐.

- 2001년 5월 2일 유럽연합 의장국인 스웨덴의 페르손(G. Person) 수장과 유럽연합 공동안보정책 고위대표(HR: High Representative)인 솔라나(J. Solana), 그리고 유럽연합의 대외관계 집행위원인 패튼(C. Patten)이 이끄는 유럽연합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 위원장과 대화를 나누었고, 이어 5월 14일 북한과 공식적 외교관계를 수립함.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집행위원회는 2002년 2월 유럽연합의 대북한 국가전략보고서(The EC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Country Strategic Paper 2001-2004)를 발간함. 유럽연합은 국가전략보고서를 통해 북한에 대한 기술지원의 목적과 전략적 틀을 제시함.

- 이 시기 가장 큰 국제적 변화는 냉전의 종식과 함께 나타난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이었음. 동유럽 국가들의 몰락과 이들 국가들의 체제 변화는 북한의 위기 의식을 증폭시켰고 이로 인해 서유럽 국가들과의 관계개선 노력이 활발해졌다고 볼 수 있음. 유럽연합 으로서는 한반도 긴장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의 조속한 해결에 관여함으로써 동북아에서의 유럽연합의 위상과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적인 의도가 있었음.

3. 유럽연합의 '신아시아 전략' 과 대북접근방식

- 유럽연합의 대북정책은 1994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채택한 '신아시아 전략(Towards a New Asia Strategy)' 의 일환으로 파악해야함. 한편, 신아시아 전략은 유럽연합이 아시아와의 경제협력과 군사적 차원에서 미국에 대응한 지역안보 구축을 위함이 주목적이었고 1993년 3월 13일 북한의 NPT탈퇴가 계기가 되었음.
- 신아시아 전략은 아시아 시장으로의 진출확대와 경제협력 증진이 정치관계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생각을 기본으로 함. 이 전략의 구체적 목표는 첫째, 유럽연합은 세계경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연합의 경제적 비중을 강화함. 둘째,

아시아지역의 정치안정을 도모함. 셋째, 아시아 빈국들의 경제발전을 도움. 넷째, 아시아에서의 민주주의와 법치의 발전, 그리고 인권 존중의 원칙 수립 등이었음. 유럽연합은 이를 통해 유럽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공동체의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목적이 담김.

- 유럽연합은 아시아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2001년 '유럽과 아시아의 심화된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적 틀(Europe and Asia: A Strategic Framework for Enhanced Partnership)' 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함. 보고서는 신아시아 전략의 일환으로 대한반도 전략을 포함함. 그 결과 2001년 EC-북한 전략보고서(The EC-DPRK, Country Strategy 2001-2004)가 탄생하였고 유럽연합의 대북한 정책이 처음으로 체계화되는 계기가 마련됨.

가. 대동아시아 정책수립 배경

- 1990년대 초반 채택된 유럽연합의 신아시아 전략에서 유럽연합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유럽연합의 경제적 비중 강화, 지역 안정, 빈국과 낙후된 지역들의 경제발전, 민주주의와 법치 및 인권신장 등의 목표를 위해 새로운 전략을 수립함. 그 핵심은 이 지역에서의 정치적 문제와 안보문제에까지도 관여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임. 특히 아시아와의 정치대화 주제의 하나로 제시한 군비통제와 핵 비확산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의 핵 위협으로 국제사회에 야기된 도전은 아시아와 유럽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유럽연합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함.

- 유럽연합이 이와 같이 새로운 아시아 정책을 수립하게 된 배경에는 첫 번째,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에 따른 국제정치경제적 위상강화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1990년대 들어서면서 아시아는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됨. 두 번째, 유럽연합의 동아시아정책은 경제적 요인 외에 유럽연합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려는 유럽연합 측의 의도와 냉전 종식 이후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과정에서 아시아 지역의 유동성이 맞아떨어진 것이 중요하게 작용함.

- 특히, 유럽연합이 심화됨에 따라 공동외교안보정책(CFSP: Common

EU는 '신아시아 전략'을
통해 아시아에서 정치적,
안보적 문제에 관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

아시아에 대한 EU의
관심증대는 미국과 세력권
확장 경쟁의 양상을 보여...

Foreign Security Policy)을 수립할 필요가 생겼고 통합된 유럽에 걸맞게 국제적 역할을 확대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됨. 동시에 국제적 외교역량을 발전시켜야만 했음. 이러한 유럽연합의 내적인 역동성이 아시아에 대해 본격적인 전략을 추진하게 되는 내적인 계기가 됨. 여기에 냉전의 종식은 아시아 지역의 유동적인 정치 상황과 맞물리면서 유럽연합이 아시아 지역을 보다 중시하게 됨.

○ 요컨대 냉전의 종식과정에 발생한 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의 상대적 위상 하락은 유럽연합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 마침 CFSP를 추진함으로써 자신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려는 유럽연합에게 이러한 기회는 놓치기 어려운 것이었음. 아시아 지역에 대한 유럽의 관심과 역할증대 노력은 냉전 이후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유럽의 세력권 확장 경쟁 양상으로 나타남. 먼저 미국은 1993년 말 아태경제협력(APEC: Asia-Pacific Economy Cooperation) 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아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함. 따라서 유럽연합은 아시아 지역에서도 APEC에 대응하면서 이 지역을 선점해야만 했음.

- 그 결과 유럽연합의 신아시아 전략의 첫 번째 가시적 결과라 할 수 있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Asia-Europe Meeting)가 탄생하게 됨. 유럽연합은 ASEM 참가를 통해서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아시아-유럽연합 삼각관계를 구축하여 미국과 균형을 유지하여 외교적 지위를 격상시킴. 유럽연합은 신아시아 전략 목표를 달성하고 안보적 발언권도 증대시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함. 이를 기반으로 정치적 군비통제와 핵 비확산, 인권문제와 민주주의 및 법치수립, 마약문제 등 정치대화를 통한 영향력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 이 지역은 이미 미국이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도전할 수 없는 지도력을 행사하고 있어 유럽연합으로서는 연성권력을 확대시키는 것이 미국과의 충돌을 피하면서 유럽연합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현실적인 대안인 것임.

- 유럽연합의 입장에서 보스니아와 코소보 내전, 체첸 공화국의 유혈사태,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같은 문제보다 북한문제가 상대적으로 공동체 차원에서 동질성을 느끼며 보다 수월하게 정복할 수 행할 수 있었음. 따라서 탈냉전 이후 전개되고 있는 유럽연합의

대북협력정책은 경제 및 정치통합과정의 심화와 확대과정에서 유럽연합의 내재적 가치를 실현하고 동질성을 확인하는 좋은 기회로 볼 수 있음.

- 유럽연합의 신아시아 전략은 첫째, 아시아 정치·경제 성장에 따른 새로운 관계정립. 둘째, 새로운 지역 안보에 대한 역할 설정. 셋째, 아시아 지역의 안정성, 민주주의 공고화와 법치, 인권성장 고무 등 유럽연합의 가치의 간접적 확인. 넷째, 아시아 빈곤 지역에 대한 인도적 차원 정책지원을 통한 유럽연합의 외교적 이미지 제고가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음.

나. 대한반도 정책 목표

○ 신아시아 전략의 일환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정치대화를 병행한 결과 유럽연합은 북한과 2001년 5월 14일 공식외교관계를 수립함. 이는 북한문제에 개입을 통해 탈냉전 후 국제관계에서 유럽연합의 정치 및 외교적 영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이었음.

○ 한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가 다시금 유럽연합의 특별한 관심 대상이 된 이유는 무엇보다 경제 성장과 민주화로 인하여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커진 데 있음. 유럽연합은 한국과의 정치대화를 강화함으로써 한국을 아시아에서 자유민주주의의 보루로 적극 지지하고 향상된 경제력에 걸맞게 경제협력을 강화하려함. 경제적 중요성과 함께 한국의 정치적 비중도 증가하였는데, 이것이 유럽연합 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됨. 특히 유럽과 아시아의 대화의 장으로서 ASEM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됨.

○ 경제외적인 측면에서도 유럽연합은 1990년대 중반 이후 한반도를 특별히 주목하기 시작함. 아시아 지역의 안보와 평화 유지를 위해 적극 개입하려는 의사를 표명한 유럽연합으로서는 북한의 핵 문제가 불거져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음. 아시아에서도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은 세계수준에서의 냉전해체와 한반도 수준에서의 냉전해체가 시간적 차이를 두고 진행되는 '냉전해체의 비동시성'으로 인해 여전히 긴장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었음.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던 러시아의 위상

EU는 신아시아 전략의 일환으로 2001년 5월 북한과 공식외교관계를 수립

EU에 의해 북한 인권침해
규탄 결의안이 채택됨에 따라
EU에 대한 북한의 시각도
변화

약화와 중국의 개혁정책으로 생긴 동북아시아 국제정치 역학관계의 변동을 틈타서 유럽연합이 한반도 국제정치에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된 것임.

- 이런 맥락에서 유럽연합의 KEDO 참여는 회원국과 유럽연합의 이해관계가 일치했다고 볼 수 있음. 유럽연합은 신아시아 전략에 근거해 KEDO 참여가 핵확산을 방지하고 핵 비확산 레짐을 강화한다는 유럽연합의 외교정책 목적과도 일치하고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안보에도 기여한다는 이유로 KEDO 집행위원회 일원으로 참여함. 또한 KEDO를 수립한 미국, 일본, 한국 정부도 중립적 멤버를 필요로 하였고 유럽연합은 동북아시아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대하려고 함. 유럽연합이 KEDO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불한 액수는 북한에 중유를 제공하기 위해서 미국이 지불하는 것과 비슷한 액수였음. 이는 유럽연합이 미국과 같은 규모의 재정 지원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한반도에 확보할 뿐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에까지 확대하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임.

다. 북한의 대유럽연합 시각변화

- 2002년 북핵문제가 재발되자 유럽연합 내부에는 강경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세력과 지속적인 설득을 해야 한다는 세력으로 의견이 나뉨. 하지만 유럽연합의 근본원칙인 핵 비확산과 인권보호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북한의 행동은 지속적인 설득을 통한 해결을 주장하는 측의 요구를 무력화시킴. 그 결과 2002년 11월 브뤼셀에서 열린 이사회는 유럽연합은 북한의 언행이 한반도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핵심적인 신뢰의 분위기를 심각하게 손상시킨다는 경고와 함께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할 것을 결의함. 아울러 “국제공동체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기 위해서 NPT를 준수하고, 미사일 실험 유예를 지속하고, 대테러 국제협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주문함.

- 이 시기 유럽연합은 북핵위기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한편,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상당한 압력을 가함. 유럽연합은 2003년, 2004년, 2005년 3차례에 걸쳐 유엔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결의안을 제출하였고, 2005년에는 UN총회에 결의안을 제출함. 이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은 2005년 11월 17일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

된 직후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예정되어 있던 유럽연합과의 정치대화를 취소함. 1998년 이후 매년 한차례씩 지속되어 오던 정치대화가 중단됨으로써 북한과 유럽연합과의 관계는 크게 후퇴함.

- 2003년 4월 16일 유럽연합 의장국인 그리스가 제안 설명을 한 대북 결의안에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등 옛 동유럽 국가들은 투표권은 없으나 대북결의안에 공개 지지를 천명함. 유럽연합에 의해 유엔 인권위원회 57년 사상 처음으로 북한 인권침해 규탄 결의안이 채택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유럽연합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던 북한의 시각에 일정변화가 불가피하게 됨.

- 현대 유럽의 정체성은 냉전 기간을 통하여 서유럽에 국한된 소수 국가들의 역내 국가와 시민들의 종교적, 인종적 유사성과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공통의 역사적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형성되어 왔음. 그리고 지난 수십 년간 축적된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인권과 관련된 가치와 규범들은 현대유럽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조건을 제공하여왔음. 여기에 2005년 중동유럽 10개국의 가입은 유럽의 단일정체성 강화와 시민권 형성을 필요로 했음.

- 그런데 중동유럽 국가의 유럽연합 가입은 유럽통합의 지속적 전망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제기함. 이에 유럽인의 시민권의 형성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인권문제의 강조로 이어지게 됨. 유럽연합 내에서의 인권문제 강조는 북한 인민의 인권문제로 확대될 수밖에 없었고, 이는 다시 북한의 대유럽연합에 대한 시각의 변화를 가져오게 됨.

4. 선택적 포용정책과 전략적 이익추구

- 유럽연합이 북한에게 요구한 인권문제 개선과 관련한 정치대화를 북한이 수용한 것은 대미 견제장치로서 뿐만 아니라 북한의 고립탈피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 여기에 북한의 식량난은 유럽연합과의 관계회복을 절실히 필요로 하였음. 유럽연합은 북한과의 인권대화를 통해 북한을 국제사회로 편입시키는 데 기여하고 한국

중동유럽국가의 EU가입
으로 EU는 인권문제를
강조하게 되어...

EU의 대북 정책은

미국이나 한국과 다른 선택적

포용 정책

정부의 화해협력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 한편, 북한의 입장에서는 유럽연합에 의한 인권문제 개선 강경 요구로 대유럽연합에 대한 시각이 변화하기 시작함.

○ 유럽연합의 대북정책은 미국의 대북한 강성권력 확산정책과는 달리 연성권력 확산의지를 갖고, 동시에 한국의 포용정책과 달리 보편적 원칙을 준수하면서 북한 사회의 개선을 요구하는 선택적 포용정책을 추구하고 있음. 말하자면 급격히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따른 미국의 적극적인 국제질서 재편전략과 생존을 추구하는 북한의 대외전략이 상호작용하면서 유럽연합과의 협력과 대결이라는 상반된 가치가 상호작용하는 양상을 보여줌.

- 유럽연합은 북한과 1998년 정치대화를 시작한 이후, 2000년 11월 '대북한 행동 지침'을 채택하여 북한의 고립보다는 대북지원을 통해 체제개방을 유도하여 북한을 국제사회로 편입시키겠다는 입장을 강조함. 또한 이 지침을 통해서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북한과의 관계발전에 보다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포용정책을 추진하고자 했음. 이는 부시 행정부의 정책과 명확히 대별되기에 충분함. 특히 2001년 초 북미대화가 단절되고 미국이 대북 강경발언들을 쏟아내는 상황에서 유럽연합과 회원국들이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추진한 것은,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이 확정되기 이전에 일정한 경로를 형성하려는 노력으로 이해됨.

○ 유럽연합의 포용정책과 한국 정부가 추구했던 포용정책은 일정한 차이가 있음. 유럽연합과 한국의 대북한 접근방식의 차이점은 유럽연합의 경우 포용정책에 분명한 '조건'을 부여한다는 점임. 하나의 예로 북핵문제가 불거진 다음에 개최된 2003년 일반이사회에서는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향후 관계는 북한측이 얼마나 신속하고 검증 가능하게 북핵 문제를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강조함.

- 북한에 대한 조건 부여는 반드시 핵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음. 인권 개선, 핵비확산, 외부지원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성 개선, NGO 활동여건 개선, 북한 경제의 개방과 구조적 개혁 등 북한 내부의 개선 정도에 상응하여 북한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늘리겠다는 것이 유럽연합의 기본방침임. 그러나 이러한 조건 부여는 외형적으로 나타난 조건에 불과함.

○ 유럽연합은 2001년 5월 북한과의 공식적 외교관계 수립 이후 대북정책의 주요 전개 방향을 대북전략보고서를 통해 분명히 제시하고 유럽연합과 회원국들의 대북정책 추진시 참고하도록 함. 유럽연합은 인권존중, 민주주의, 법의 지배추구라는 일반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경제·사회적 발전, 세계경제 편입, 빈곤퇴치를 협력 목표로 설정함. 특히 인권,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남북한 화해, 북한경제구조개혁 등과 관련한 북한당국의 협조 여부에 따라 유럽연합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즉, 공식적으로는 북한당국이 인권문제 이외에 핵문제, 경제정책 등에서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에 가시적인 성과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 유럽연합을 비롯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압박은 강화될 것임. 한편, 이와 비례해서 비공식적 행위자인 초국적 기업들과 비정부기구(NGO)의 역할은 한층 증대될 것임.

- 요컨대 인권문제는 유럽연합에게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의 문제임. 민주주의의 확산, 선정, 법치, 핵비확산 등도 유럽연합이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에 속함. 따라서 유럽연합에게 있어서 이러한 중요한 가치와 북한의 개선을 도모하는 정치적 대화와 경제적 지원의 연계는 당연한 것임. 유럽연합이 2002년 북핵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대북한 기술지원, 즉 개발원조 제공 계획을 정지시킨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음.

○ 유럽연합은 2008년 9월부터 총 8백만 유로(2007년~2010년까지 4년 동안 3,500만 유로(약 5,200만 달러)를 지원금으로 책정)를 지원해 북한의 농업 생산량 증대를 돕기 위한 식량안보사업(Food Security Program)을 시작했음. 식량안보사업은 당초 2002년 배정된 것으로 현재까지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가 2009년에 뒤늦게 쓰이게 된 것임.

- 이와는 별도로 2009년 한 해 동안 보건의료와 식수위생 사업을 위해 약 300만 유로(약 400만 달러)를 지원함. 집행위원회 산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식량안보지원국의 지원을 받아 본 사업에 참가한 단체들은 독일의 '저먼 애그로 액션(German Agro Action)', 영국의 '세이프 더 칠드런(Save the Children)', 아일랜드의 '컨선 월드 와이드(Concern Worldwide)', 프랑스의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Triangle Generation)' 과 '프리미어 일전스(Premiere

EU는 인권, 핵 비확산 등의 가치와 대북 자원을 연계

EU는 공식적 지원 규모는 줄이는 대신 인도적 지원, 기업 투자를 계속

Urgence)' 등 북한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활동 중인 유럽의 5개 NGO와 벨기에의 본부를 둔 국제 NGO인 '핸디캡 인터내셔널(Handicapped International)' 등 총 6곳임.

- 유럽연합의 대외원조는 장기간에 걸친 원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수혜국가에 가장 필요한 원조를 제공하는 것으로 명성이 높음. 대규모적인 물량 지원과 건설사업 등과 같은 선심 사업보다는 현지 지역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제공함. 프로그램 지원은 국제기구와 유럽연합 회원국 소속 NGO등과 결합하여 농촌개발사업, 교육, 의료 등에 중점 지원하고 있음. 특정 프로그램에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비축한 NGO가 유럽연합의 대외원조를 지원받아 수혜국가 중 가장 필요한 지역에서 활동을 펼치고 있음. 예를 들면, 독일 NGO의 평안북도 농자재 지원 사업, 프랑스 NGO의 아체(Aceh)지역의 병원운영 사업 등이 있음. 현재 유럽연합의 대북지원활동을 살펴보면 교육프로그램, 의료, 취로 사업 등에 집중하고 평양지역보다는 가장 수혜가 필요한 평안남북도 지역에 집중하여 진행하고 있음.
- 유럽연합은 공식적 지원규모는 줄이는 대신, 인도적 지원사업과 초국적 기업을 통한 대북투자는 꾸준히 진행하고 있음. 이는 첫째, 북한의 광물 및 지하자원에 대한 선점, 둘째, 기간산업 선점, 셋째, 시장 확대 대비 포석의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음. 북에 대한 외국자본의 관심이 다시 제고되기 시작한 것은 2002년 북한이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내리면서부터임.
 - 7.1조치는 물가 및 환율조정, 종합시장의 허용 등 시장경제의 제한적 활동, 신의주특별행정구 창설, 남북경제협력의 공식화, 제도화를 통한 금강산, 개성 등 경제특구 추가 건설이 골자였음. 7.1조치 이후 유럽연합 기업들의 북한에 대한 관심 제고는 2001년 5월 초 페르손 스웨덴 총리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면담으로부터 시작됨. 면담 직후 북한과 유럽연합 간에 외교 관계가 수립되었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01년~2004년까지의 대북한 전략을 담은 대북한 국가전략보고서를 채택해 지속가능한 농촌개발에 500만 유로, 천연자원 관리 및 사용에 300만 유로, 제도적 지원과 역량 강화에 700만 유로 등의 기술 지원을 실시하는 국가지표프로그램(National Indicative Program 2002~2004 DPRK)을 채택함.

〈표 2〉 EU 주요국의 대북무역 및 점유율 현황(2001년~2007년)

| 구분/년도 | 2001 | | 2003 | | 2004 | | 2006 | | 2007 | |
|-------|---------|-------|---------|-------|---------|-------|---------|-------|---------|-------|
| | 금액 | 점유율 | 금액 | 점유율 | 금액 | 점유율 | 금액 | 점유율 | 금액 | 점유율 |
| 독일 | 104,833 | 33.4 | 96,466 | 28.2 | 91,193 | 34.9 | 76,294 | 32.5 | 51,265 | 36.7 |
| 영국 | 42,747 | 13.6 | 16,105 | 4.8 | 1,163 | 0.4 | 19,097 | 8.1 | 15,131 | 10.8 |
| 네덜란드 | 11,491 | 3.7 | 100,011 | 29.5 | 18,819 | 7.2 | 32,171 | 13.7 | 27,864 | 19.9 |
| EU총계 | 313,523 | 100.0 | 338,513 | 100.0 | 261,214 | 100.0 | 234,622 | 100.0 | 139,731 | 100.0 |

- 회원국 기업들의 투자 동기별 사업 유형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음.
 - 첫 번째는 텅스텐, 마스네사이트, 몰리브덴과 같은 천연자원 확보가 최우선 목적이라 할 수 있음. 전 세계적으로 자원·에너지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미지의 개척지대로 광물자원의 보고로 평가 받고 있음. 따라서 북한의 광물 및 지하자원에 대한 유럽연합의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임. 지하자원을 선점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투자 사례로는 영국의 '아미넥스 PLC' 사의 유정개발 관련 투자를 들 수 있음.
 - 두 번째는 기간산업 선점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음. 북한의 국제 사회로의 편입이 진행된다면 기간산업에 대한 막대한 외자의 대북투자를 예상할 수 있음. 기간산업은 선점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회원국 기업의 투자가 가장 활발한 분야임.
 - 세 번째는 미개척 시장으로서의 북한을 저렴한 동북아 생산거점으로서 활용할 가능성 때문임.
 - 네 번째는 북핵문제 해결 및 테러 지정국 해제 등으로 각종 제재가 해소된다는 가정 하에 신흥 이머징 마켓(emerging market)으로서 잠재 성장성에 대한 기대 차원의 투자가 이루어지 지고 있음.

○ 유럽연합의 초국적 기업들은 북한의 사회간접자원, 서비스 분야에 관심이 높음. 이 분야에서 유럽연합 기업들의 대북진출을 돕고 이머징 마켓을 선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 기업들은 평양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음. 영국의 IMC(International Business Consultancy), KBC(Korea Business Consulting), 프랑스의 리부라 카운셀사, 독일의 DHL, KCC유럽(Korea Computer Europe), 칼 괴테그룹, 이탈리아의

회원국 기업의 투자 동기는 다양

EU는 인권문제를 거론함과 동시에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기업인을 활용

브린 델리, OTIM(국제 해양수송조직주식회사), 스위스의 EBA 등이 대표적임. 이들은 투자컨설팅, 법률자문, 비즈니스 스쿨, 물류, 상점개설, 인터넷 인프라 서비스를 통해 북한과 국제사회 교류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5. EU의 한반도에서의 역할 전망

- 유럽연합은 정치적 사안인 인권문제를 거론함과 동시에 설명한 바와 같이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민간 기업인을 활용하고 있음. 북한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국 진출 유럽 기업들은 북한의 사정을 잘 모르는 유럽연합의 정책결정 실무진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함. 또한 통상정책 의사결정구조의 복잡성은 초국적기업으로 하여금 그들의 정보력과 자원을 동원시키기에 상당히 용이한 구조로 변화하고 있음.
- 유럽연합은 대북협력정책을 경제 및 정치통합과정의 심화·확대과정에서 내재적 가치를 실현하고 동질성을 확인하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고 있음. 그러나 유럽통합의 심화는 자연스럽게 인권을 강조하게 되었고, 이는 유럽연합-북한 간의 공식적인 관계의 악화에 일조하게 됨. 그럼에도 유럽연합은 북핵 문제의 재발과 인권 문제와는 별도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식량 지원, 기술지원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음.
 - 이와 함께 개별국가 차원에서 자원 및 기간산업 선점 목적의 대북한 투자를 늘리는 초국적 기업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음. 국가적 시장 간의 상호의존관계와 상호침투과정의 증가는 초국가성이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기능하게 하고, 국가나 초국가 제도도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게 됨. 따라서 유럽연합은 한반도에서 투자만큼의 균형자 역할과 새로운 국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음.
- 대북정책을 통해 본 유럽연합은 보편적 인권을 강조함으로써 규범적 권력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임. 유럽연합은 대북 인권정책을 통해 타자와는 다른 베타적 권리를 누리고 있음을 확인해감으로써 그들만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있음. 즉, 유럽연합

은 북한 인권문제 제기를 계기로 유럽내부의 온도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동시에 유럽 시민권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고는 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유럽연합은 유럽 내부의 민주성 결핍문제 해결과 정체성 확립, 관료정치 문화라는 비판을 개선하고자 함. 인권의 보편성이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획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유럽연합의 대북인권정책이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유럽연합은 보충성의 원칙을 앞세운 회원국가의 독자적인 문제해결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음. 이는 규범적 권력의 확산과 전략적 이익사이에서 갈등하는 이중적 모습으로 나타남. 그 결과 회원국들의 대외 원조정책은 유럽연합의 대외 원조정책의 방향과는 다르게 국가의 전략적 이익을 우선하는 경향이 있음.
- 북핵문제의 재발에도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자원 및 기간산업 선점을 목적으로 대북한 투자를 늘리는 초국적 기업들의 숫자도 줄지 않고 있음. 따라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식량 지원, 기술적 지원의 목적은 규범적 권력의 확산 차원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음. 국가적 시장 간의 상호의존관계와 상호침투과정의 증가는 국가나 초국가 제도도 시장의 초국가적인 요구에 부응하게 만들.
- 아직 조문화작업과 양쪽 의회의 비준동의 등 넘어야 할 절차와 과제가 많이 남아있으나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은 2009년 7월 13일에 양측 간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마무리됐음을 공식 선언했음. 이제 우리나라는 대북 경제정책에 관해서도 유럽연합과 정책을 조율하고, 한-유럽연합 간 대북 공동투자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북한에게는 경제적 지원의 확대 및 북한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으며 한미일 공조를 보완할 유용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또한 대북원조의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유럽의 NGO와 공동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유럽연합과 북한 간 경제관계 확대는 북한의 대외개방과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활동하게 되는 공간의 확대로 이어진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 지원·활용할 필요가 있음.

대북정책에 관해 우리나라는 EU와 정책을 조율하고 공동투자의 가능성도 모색해야...

편집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